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 I.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과 미국의 아웃사이더 선택
- II.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변화
- III. 한반도에서의 미·중 세력 경쟁 심화
- IV.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전망
- V. 트럼프 시대 북·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요 약〉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의 변화를 검토하고 북미관계와 북중관계 분석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였다.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과 미국국민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선택으로 2017년 국제 질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공통점은 세계화에 대한 반대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면서 국내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키기 위하여 경제와 무역에 중점을 둔 대외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중 양국의 경쟁은 오바마 시기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경쟁이 다른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미·중 경쟁 관계도 심화될 것이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슈에 대해 지속해서 선택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서 미·중간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른 원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가속화에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군사협력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려 하겠지만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세력 균형이 기울어질 경우 북한과의 일정한 협력의 끈을 이어갈 것이다.

1. 문제 제기: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과 미국의 아웃사이드 선택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2017년 국제 질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들은 유럽연합(EU)의 잔류와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선택하였다. EU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도 영국이 EU에 잔류하기를 희망하였고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전문가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은 전체 영국 경제에 플러스가 아닐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부 젊은 세대들은 국민 투표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1세기 들어서서 팽배해있던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세계화는 각 국가들의 무역 장벽을 허물고 각 국의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등의 장벽을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저임금을 찾아 국내기업은 해외로 이동하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마저 유입된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으로 운영해나가자 중산층의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논리이다. 또한 EU는 여러 국가들이 공동운명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의 구제 금융 사태에서 보듯이 한 국가의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하고 EU에서 필요한 각종 규제들이 각 국가에는 불필요하거나 능률이 저하되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최근 EU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태와 난민의 처리 문제 등이 각 국에게 부담이 되었고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확대되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였던 진영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민자난민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민자들이 영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혜택에 무임승차할 뿐만 아니라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터키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

이와 동시에 2016년 말 미국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은 여론 조사상에서 우위를 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를 제치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하였다.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반세계화

1) 민정훈, “브렉시트(Brexit)가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33호(2016), p. 5.

라는 국민들의 견해가 투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류 중산층들은 1960-1970년대 풍요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몰락하면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이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월스트리트(Wall street)를 중심으로 부패한 금융기관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트럼프는 기존 정치권과 거리를 둔 아웃사이드(outsider)라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쓴 소리를 하면서 백인 중산층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간주되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면서 국내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고립주의’라고 지칭되는 그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하여 경제와 무역에 중점을 둔 대외정책을 강조하고 있다.²⁾

그 핵심은 보호무역의 강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탈퇴를 선언하였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의 수정 의견도 피력하였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정책은 국제 통상 질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反)이민 정책은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2) 김현욱, “클린턴 대 트럼프: 차기 미국 대선후보들의 대외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32호(2016), p. 15.

난민 및 이민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 이슬람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반 이슬람 테러 협력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여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냉랭했던 미·러관계의 일정한 변화도 감지된다.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북·미관계와 북·중관계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기로 한다.

II.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변화

트럼프 행정부 이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policy)’로 상징되는 재균형(rebalancing policy)정책을 아시아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해양력 강화를 저지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정치안보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의 재균형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아시아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방향은 아시아에 대한 관여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슈에 따라 더 확대된 관여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승인한 유일한 아시아 정책 기고문에서 그레이(Gray)와 나비로(Navarro)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정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국방력, 특히 아시아에서 해군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역내 위상을 강화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더 큰 힘과 전투태세가 아시아의 자유주의 질서의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반이며 특히 “아시아의 지역적 안정의 가장 큰 원천”으로 해군력을 350척 수준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경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하였다.³⁾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중 양국의 경쟁은 오바마 시기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국익을 침해하는 핵심 상대는 중국으로 중국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모든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가져오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의 관료적 특성과 미국경제에 미칠 파장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 쉽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미국이 먼저 선전 포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경쟁이 다른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3) Alexander Gray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최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54호(2016), p. 5-11에서 재인용함.

총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비판을 초래한 바 있다. 미국은 미국의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대만이 자국 방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양안 관계가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되는 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대만 정책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18일부터 미 해군의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하였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항모 전단을 전개해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지난 15일 칼빈슨호의 남중국해 파견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각 도서와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미국에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도전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통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존중하지만 어느 국가도 항행 및 통과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5일 필리핀 수비크만 북서쪽 50해리 남중국해 해상에서 미국 해군 함정 보우디치함이 회수 중이던 무인 수중 드론 1대를 압류했다가 미국의 맹비난으로 닷새 만에 이를 반환한 바 있다.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중국의 해양력 강화에 대비하여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여기는 남중국해에 대한 긴장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미·중간의 안보 및 경제적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양국의 세력 경쟁 강화도 예상된다. 아시아

4) 『연합뉴스』 (2017.02.19).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중 양국의 요구 사안도 확대되고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Ⅲ. 한반도에서의 미·중 세력 경쟁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무임승차에 따른 미국의 지나친 비용 부담을 비판하면서 한국 및 일본의 비용분담 증대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필수적인 기존 역내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그레이와 나비로는 동맹정책과 관련하여 일본, 한국, 인도, 미얀마, 베트남이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과의 더 긴밀한 유대를 추구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국가들이 베이징을 견제해야 할 무뢰한이자 잠재적 침략자로 보기”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간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한·미동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미·중관계의 세력 경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으나 국내 정치 변동과 맞물려서 사드 배치 재논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 내 논쟁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과 이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원인이 되고

5) 위의 글, pp. 12-13.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이로 인해 한류콘텐츠의 확산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을 비공식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0월 이후 EXO를 비롯한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중국 드라마 출연 배우가 교체되거나 한·중 동시방영을 중단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한·중 교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다.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은 공식적 무역 보복이 아니라 검역, 기술장벽,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들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나 자본재는 중국 산업계에 일정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중국 당국의 개입이 한계가 있겠으나 대중수출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소비재, 관광, 유통, 한류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적 압력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⁶⁾ 또한 기존 협력 분야 외에 신규 투자 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적신호가 생긴 것이다. 이미 중간재나 자본재는 가치사슬 협력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중국 내수시장과 신산업에서 활로를 모색하려 하였는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몽니를 겪을 수도 있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외교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미·중 안보 경쟁은

6) 지만수,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와 사드 영향,” 『중국연구센터 제42차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2017.02.16.).

한국으로서는 양자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우며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국내적 논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국력의 낭비와 소모적 논쟁도 발생 가능하다.

게다가 안보를 의존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상대국에게 손실이 될 수 있는 더 다양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익 충돌하는 이슈에 대해 지속해서 선택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IV.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전망

한반도에서 미·중간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른 원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가속화에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한국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군사협력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 핵개발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한국의 선택이라고 본다면, 북한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안보 경쟁 심화는 미·중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2016년 제4차 및 제5차 핵실험을 연달아 시행하면서 핵보유국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대강의 대결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의 핵 폐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전체의 군축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북한이 말하는 군축회담이란 주한미군의 감축 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또 다른 대화의 장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든 미국에 대한 북미 양자 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선 정국 시기에 민주당 힐러리 후보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선호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후보가 대선 기간 동안 북한과 절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金正은이 더 이상 마음대로 나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외선전용 월간 매체 〈조선의 오늘〉 2016년 6월호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 지도부와의 직접대화도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트럼프는 막말후보나 괴짜후보, 무식한 정치인이 아니라 현명한 정치인이고 선견지명 있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평가하였다.⁷⁾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strategy patience)’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7) 백학순,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세종논평』 No. 327(2016), p. 3.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민주당 후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북한의 반응이 북한 당국의 공식 반응이 아니라 대외선전용 월간 매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북한은 11월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바라는 조선 핵포기는 흘러간 옛 시대의 망상”이라고 언급하였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새 행정부가 핵강국과 상대해야 할 더 어려운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1월 10일 <조선신보>는 “달라진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고 지금도 교전 관계에 있는 상대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태도가 불가결하다”면서 “시간을 허비할수록 조선의 핵억제력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미국의 안보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와 차별화를 부각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으로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첫 미·일 정상회담인 2월 12일 만찬 시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은 미·일 양국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명분을 마련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매우 강하게 북한을 다룰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⁹⁾ 북한의

8) 위의 글, p. 3.

9) 『연합뉴스』 (2017.02.13).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일본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 시기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고려하여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기의 발언처럼 쉽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내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으며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의 엘리트들도 대부분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지지하는 이들이다. 또한 현재 미국 의회의 다수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국 재지정이나 강력한 인권제재 관련법들도 실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북·미 대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공식 접촉보다는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 것이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지속될 것이다. 비공식 북·미 대화가 실질적 성과를 이루려면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으로 갈 필요성이 있으며 양자간 대화는 사전 접촉의 의미가 클 것이다.

V. 트럼프 시대 북·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외의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중국의 정책 방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한 북한의 압박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차지하는 중국의 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2017년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였다. 2016년 12월 결의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북한의 최대 석탄 수출국인 중국이 석탄 수출의 제한을 둔 것이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및 환율을 비롯한 경제 문제에 대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로 인한 갈등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적 해결 과제인 미·중 경제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려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중국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주변국들이 압박할 경우 도발을 더 강행하고 핵개발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마이 웨이(my way)’로 간다면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만 감소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이지만 그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시행한 북한의 석탄 수입 금지도 올해 내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재개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등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미국과의 세력 균형이 기울어질 경우 북한과의 일정한 협력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가 정해놓은 핵개발 계획에 따라 핵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려 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면서 북한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전망이다. 만약 북한이 대북제재의 타개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중국이 북·미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해준다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다. 미·중간 대북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일정 부분 협력은 가능할 것이지만 한반도에서 급격한 세력균형 변화는 그 협력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국내 정치 변화는 이들 국가들 모두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이것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한국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욱. “클린턴 대 트럼프: 차기 미국 대선후보들의 대외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32호(2016).

민정훈. “브렉시트(Brexit)가 미국 대산과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33호(2016).

백학순.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세종논평』 No.
327(2016).

지만수.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와 사드 영향,” 『중국연구센터 제42차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2017).

최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54호(2016).

Gray, Alexander and Navarro, Peter.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Trump, Donald. *Great Again: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Threslod Edition, 2015.

「연합뉴스」.